

출장복명서

일본 사례조사 및 심층면담

- 일본 협동조합 관련 -

2016. 8.

< 출 장 개 요 >

□ 출장목적

- G20 연구로 이루어지는 「한국 협동조합의 건실한 발전방안: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일본 사례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
 - 2013년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올해 「제2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 이후 G20 연구로 이루어지는 본 기본과제 연구보고서에 활용교훈으로 삼을 일본 협동조합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을 하고자 함.

□ 출장지 및 방문기관

- 출장지: 일본 도쿄
- 방문기관 및 면담자
 -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日本医療福祉生活協同組合連合会)
 - 일본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全国大学生協同組合連合会)
 - Kurimoto Akira(栗本 昭) 교수(Hosei(法政) 대학 대학원)
 - Takeda Haruhito(武田 晴人) 교수(전 Tokyo(東京) 대학)
 - 우종원 교수(Saitama(埼玉) 대학)

□ 출장자

- 출장자 수: 총 6명
 - 김준경 원장, 권정현 부연구위원, 김선진 전문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최정애 전문연구원

□ 출장일정

- 일정: 2016년 8월 30일(화) ~ 31일(수)
 - 8월 30일(화) ~ 31일(수), 1박 2일: 김선진 전문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최정애 전문연구원
 - 8월 31일(수), 1일: 김준경 원장, 권정현 부연구위원

○ 세부 일정(안)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해당자
8/30 (화)	08:40~10:45	출국: 서울(김포) → 도쿄(하네다) (OZ 1085)	김선진 나정희 권성진 최정애
	10:45~15:00	이동 및 중식	
	15:00~18:00	일본 전국대학생협연합회 방문	
	18:00~	간담회 (1)	
8/31 (수)	07:45~09:55	출국: 서울(김포) → 도쿄(하네다) (OZ 9128)	김준경/권정현 김선진 나정희 권성진 최정애
	09:55~11:00	이동	
	11:00~13:00	일본의료복지생협연합회 방문	
	13:00~15:00	간담회 (2)	
	15:00~18:00	일본 산업 구조조정 전문가 면담	
	18:00~20:05	이동 및 간담회 (3)	
	20:05~22:25	귀국: 도쿄(하네다) → 서울(김포) (OZ 1035)	

○ 숙박호텔: SUNROUTE PLAZA SHINJUKU

- 2-3-1 Yoyogi, Shibuya-ku Tokyo, JAPAN / tel. +81-3-3375-3211
- 출장자별 숙박 예약 완료 및 사후 실비정산(조식 불포함)

< 질 의 내 용 >

1. 일본 의료복지생협연합회

☐ 질문사항

- 의료생협의 현황과 과제는?
- 의료생협의 특징은?
- 조합원의 보건활동은 어떠한지?
- '지역을 통틀어 건강하자'는 움직임은 어떠한지?
- 의료생협은 '지역포괄케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 의료생협 현장방문 시 추천 의료생협은?

☐ 자료 및 문헌

- 의료생협의 현황과 과제(사업보고, 중기계획 등)
- 조합원의 간호평가, 직원의 의식조사 보고서(최신판)
- '지역을 통틀어 건강하자', '지역포괄케어'에 관한 보고서
- 의료생협에 관한 문헌, 논문 등

2. 일본 전국대학생협연합회

☐ 질문사항

- 대학생협의 현황과 과제는?
- 대학생협의 특징은?
- 학생 조합원 활동은 어떠한지?
- 대학생협은 학생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 대학생협은 대학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 대학생협 현장방문 시 추천 대학생협은?

☐ 자료 및 문헌

- 대학생협의 현황과 과제(사업보고, 중기계획, 비전 등)
- 학생생활실태조사, 조합원 의식조사 보고서(최신판)
- 의료생협에 관한 문헌, 논문 등

< 방문면담내용 >

1. 일본 전국대학생협 연합회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15:00~17:00
- 장소: 일본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KDI: 김선진 전문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최정애 전문연구원
 - 외부연구진: Kurimoto Akira(栗本 昭) 교수(Hosei(法政) 대학 대학원)
 - 일본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全国大学生生活協同組合連合会): Yanagida(柳田) 실장

□ 주요 회의 내용

□ 대학생협의 현황과 과제

- 1000여개 대학 중 200개가 대학 생협이 있음. 생협법에 의해 인가를 받음. 300만 명 학생 중에 140만 명 학생이 대학 생협 조합원으로 활동
- 사업에 대해 설명:
 - 1) 식당운영: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2) Meal 카드를 만들거나 교통비를 1년에 15만원 정도 입금해두고 활용할 수 있게 함. 선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학부모들도 선호. 언제 뭘 먹었는지 서버에 전부 저장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 점포운영: 문방구, 서점 등을 운영. 일본도 책읽는 학생들이 줄어 들고 있는 경향을 보여, 학생들 독서 마라톤으로 책 권장하는 운동도 하고 있음. 서적 판매에 있어 상법상 CD 가격은 가격이 일본전체가 통일되어 있어 보통은 할인 받을 수 없지만 대학 생협만은 예외로 두어 5~1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음.
 - 3) 공제사업: 의료 공제. 대학 생협 조합원 중 3분의 1은 공제사업에 돈을 내고 있음. 특히 공제사업을 하기 전에는 학생들 중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원인을 몰랐는데 공제사업 이후에는 자살의 경위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자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파악에 한계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 신입 환영회의 과격한 행동들을 대학 생협이 있는 곳에서는 학생들 스스로도 자제하고 있어 효과적. 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보험금을 나중에 환급받는 절차 등을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4) 커리어 형성 지원: 선후배 멘토링. 학교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달라서 멘토 강습, 취직

어드바이스, 기업체 연계 사업 등. 일본은 신학기 4월. 1-3월은 합격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 입학자의 5분의 1이 참여.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3-4학년 선배들이 직접 진행.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대학 생협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 하기도. 대학 전체의 오리엔테이션 중에 일부분으로 진행하는 정도지만 대학 생협의 오리엔 테이션에 대한 호응도가 점점 좋아져.

- 5) 사회 및 지역공헌: 재해지역 지원 및 관련 스터디, ICA 회원으로서 국제 활동. 한국 대학 연 협회와의 교류.
- 6) 생협 활동 참가: 생협법에 의거, 총회, 총 대회(학생은 8-90% 참여), 이사회(학생이 5-60% 참 여)를 수행. 대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발. 이사회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의외의 인물이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도 함. 이사장은 교수, 전무이사는 직원 중에 선출.

□ 매년 1-2개의 생협이 신설. 전국에 만명 정도가 활동하지만 매년 대학 생협에 대해 나쁜 의견은 없었음. 2001년에 만장일치로 생협법이 통과.

□ 질문: 일본 학생들이 생협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 일본 입학 시점에 신입생 환영회를 생협, 혹은 동아리가 진행. 학생회가 유명무실해진 자리를 생 협이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됨.
- 홋카이도 대학의 경우에는 매년 60명 신입생 중 4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 학생 조직 위원회 를 보면 2000명 중에 20명은 남아서 조직 위원회를 유지. 매년 평균 2000명중 20명은 조합원 활 동을 함.

□ 일본 생협의 문제점:

- 1) 점점 학생뿐 아니라 대학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인기 대학에서 대학생협이 살아남고 있어 단 순히 학생수와 대학수가 줄어드는 것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시할 수 없는 감소추세.
- 2) 경영: 서적 판매 감소. 학생 지출 자체가 감소추세. 온라인 사이트와의 경쟁 증가.
- 3) 10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 식당을 만들고 무료로 생협에 임대하여 저렴하게 식사 제공해왔지만, 현재는 민간 자본을 들여와 경쟁하여 대학 수익 남는 쪽을 선호.
- 4) 환경보존 활동, 평화 활동 같은 활동에 관심을 갖는 대학 생협 역시 감소 추세
- 5) 예전에는 교수, 직원들이 대학 생협에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생협을 만든 1세대 교직원이 퇴임. 생협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할 수 없는 한계점. 오히려 최근에 만들어진 생협은 의욕적으로 활 동하지만, 만들어진지 5-60년 된 메이저 대학생협은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임.
- 6) 예전에 사업 규모가 작은 대학 생협이 지역들과 공동구매를 했음. 현재까지 7개 지역. 지금은 세븐 일레븐 같은 민간 경쟁이 치열해서 7개의 구역보다 통합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좋은데 그 정도 규모는 불가능한 상황.

□ 대학생협의 특징:

- 총회, 이사회: 본인들의 조직이라는 자각.
- 대학 안의 식당, 매점 영업권 법률이 특별히 정해져 있음. 우리나라처럼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식당, 매점에 대한 특별법 존재(생협법).
- 생협법은 기본적으로는 조합원만 쓸 수 있지만 대학생협은 조합원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음.
- 출자자(조합원 될 수 있는 범위): 입학자, 졸업예정자, 졸업자. 퇴직자, 휴직자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조합원 범위가 규정됨. 4년 있으면 교체.
- 비영업적 사업: 수험생, 신입생 정서 안정, 전쟁 평화에 대한 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 생협법에 의해 법률로 정해지는 것: 월 1회 이사회, 년 1회 총회는 필수. 학생들, 교직원들이 총회, 이사회를 통해 생협의 문제 해결.
-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대학 생협 교직원은 학생들의 적극성 등에 대해 새로 배우는 계기로 삼기도 함. 직원들 자부심과 의식 고취에 도움.
- 타 대학 생협들과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 학생의 조합원 활동: 학생 위원회 활동. 학생 위원회는 1만 명(무보수. 가끔 1년에 만엔 정도 사례비로 받기도 함). 직원들은 2천 명 정도.

- 학생들의 활동 동기: 선배들에게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물려줌.
- 학생들의 위원회 활동: 간부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사로 선출되기도 하고, 이사로 선출된 후에 대표이사를 선출하기도 함.
- 이사회, 학생 간부의 활동: 생협 활동으로 불가능한 활동 요청도 많음. 가령 학생들이 수업 선택할 때 이사회에 건의. 생협과는 별개의 일인데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생협 활동에 포함시켜 과목 선택비결 등을 리뷰 받을 수 있게 함.
-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 대학생협과 대학과의 관계:

- 대학 생협법에 있어 생협은 사업을 하는 모체가 되는 법인. 대학 생협과 대학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협력관계. 식당이나 매점 같은 사업에 있어서 원래 대학이 해야 할 업무를 생협이 대학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 각 대학과 생협의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가짐.

□ 질문: 총장과의 독립성. 총장의 성격에 따라 생협과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우리나라 대학 생협의 경우(한국외대) 총장 때문에 존재 위기를 겪은 적도 있다.

- 답변: 대학 생협 자체의 실력에 따라 달라질 듯. 총장 리더십에 대항하는 부총장, 직원, 학생 등이 존재한다면 달라질 수 있음. 일본은 총장에 대해 10-20명 학생들이 건의하면 총장의 의지도 움직일 수 있음.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음. 교수회를 무시하는 막무가내 사립대 총장

이 대학 생협에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생협 해산하여 민간 기업에 위탁.

- 재 질문: 대학의 자율화 정책으로 학교가 경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음. 교육부의 정책 역시 수익 위주.
- 재 답변: 일본 문부성에서도 대학 평가 지표의 하나로 외부자금 확보가 존재. 그러나 어떤 대학은 생협 수익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경쟁을 붙이기도.
- 재 질문: 한국 대학 생협 연합회에서는 대학 지표에 협동조합 운영 지표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재 답변: 평가 기준은 일본에는 없다. 기준은 아니지만 수험생들의 안내서에는 생협 여부가 들어간다. 품질과 퀄리티의 척도로 생협을 활용하고 있는 것.

□ 대학 생협의 주관부처: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어떤 연계가 있는지?

- 관계가 좋다. 전국 대학 생협 연합회 총회에 후생노동부는 오지 않지만 교육부 과장님은 온다. 교육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대학의 학생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생협과 상담하는 것.
- 문부과학성이 대학 생협에 지원하는 것: 제도, 예산 지원은 없지만 생협의 의견을 대변해줌. 2004년에 국립대 법인화시 생협 만든 무상으로 매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 의견을 보냄.
- 생협법의 주관부처 후생노동성은 문부과학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터치 하지 않으려 함. 후생노동성이 생협을 지원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정도임.

□ 국립대, 사립대 활성화 된 대학 생협 사례로 각 대학의 학생회장, 이사장, 전무이사 인터뷰 요청: 동경대, 와세다대.

- 질문: 수도권, 지방은 학생 수가 적고 수익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지만 생협이 꼭 필요하다. 일본은 어떤가.
- 답변: 한국과 다름. 오히려 수도권 대학은 주변에 경쟁상대가 워낙 많아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지방은 생협 밖에 없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는 아님. 일본은 문구, 서적 거래처로 송부료를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해줌.
- 질문: 지방 학생 수가 적은 곳의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내야 하는가?
- 답변: 일본의 경우에는 천명 이하의 학생 수를 가진 지방 대학은 판매자를 파트타임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성을 맞춤. 각 대학은 규모가 작아서 지역 연합회가 존재(전국 9개 연합회). 연합회 입장에서는 지역 연합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을 추진 중.
- 질문: 사업연합회의 역할
- 답변: 공동구매(컴퓨터). 결산서를 지역연합회에서 통으로 계산. 회계 시스템도 공동으로 운영. 사업 연합회가 더 파워가 있게 되어서 대학 개별적인 대학 생협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하여, 개별 생협과 사업 연합회 업무에 구분을 두고 있음.

□ 자료:

1. 대학생 소비생활 패턴 분석 자료: 매년 실시

2. 위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대학생 소비생활 패턴 분석 자료집 발간
3. univ co-op: 조합원(교직원, 학생 위원회)에 배포되는 잡지. 일년에 4-5회 발간
4. 총회자료

2. 일본 의료복지생협 연합회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8월 31일(수) 11:00~13:00
- 장소: 일본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KDI: 김준경 원장, 권정현 부연구위원, 김선진 전문위원, 나정현 전문연구원, 정성진 전문연구원, 최정애 전문연구원
 - 외부연구진: Kurimoto Akira(栗本 昭) 교수(Hosei(法政) 대학 대학원)
 -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日本医療福祉生活協同組合連合会)
: Tokubo(東久保) 전무이사

□ 주요 회의 내용

- 일반 현황
 - 의료복지생활협연합회 안내서 20페이지, 의료 복지 생협의 개요. 개요 사업 수익, 의료 시설 수, 개호(돌봄)수에 대해 2012년부터 14년까지 제시
 - 21페이지: 일본 의료 생협은 전국에 110개.
 - 22페이지: 회원사 수익 제시. 22페이지 1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오렌지 부분이 의료 사협. 나머지 붉은 색은 개호 복지 사업. 비율은 8:2 정도. 그 아래 표는 직원 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그 옆에 간호직원, 개호 직원, 이하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임. 특히 간호사 수가 12,000명 정도로 가장 많지만 개호 부문에 관심이 많아지고, 의료정책에서 지역돌봄이 강조되면서 직원과 수익구조에서도 개호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23페이지: 조합원수(2015년 말 기준 290만 명). 출자금(833억엔), 지역 지부 조직 상황. 전국에 의료 생협 회원지부가 존재하며, 의료생협은 현, 도시부에 많이 존재. 농촌의 소외된 지역은 농협의 의료기관에서 커버함.
 - 연합회 사업: 생협 협동조합 간 연대, 정보 공유, 사회 연대 사업, 직원 확보, 육성사업, 지도사업, 출판 및 연수
-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 연합회로서 전국적으로 헬스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음(예:치매 관련 뇌 활성화, 염분 줄이기 캠페인 등). 이를 위해 일반조합원 중에서 지식을 가진 리더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발간하고 강좌를 개최함. 리더는 지부, 반에 교육을 전파함.
 - 조합원 평균 연령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나 60대 후반정도 될 것으로 보임. 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므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고령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조합원 전체에서 고령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님. 건강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때문에 연령을 묻는 것이

- 무의미하여 통계를 내지 않음. 어 땡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지 관심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함.
- 고령화 사회에 있어 연합회 운영에 영향이 있지는 않음. 굳이 들자면, 고령자 분들은 활동 범위가 좁으므로 세분화된 운영 필요함.
 - 의료 생협 활동 지역 확산에 대해서는 긍정적.
 - 의료 생협의 역할: 건강한 지역과 사회를 만들자는 미션.
 - 의료 시스템에 있어 의료 생협의 지위 및 강점: 20페이지 의료 시설 수에 따르면 병원 70개, 진료서 344개로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1차 및 2차 의료를 커버하며, 부분치료가 아닌 신체 전반에 관해 생활 습관에서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홍보를 함.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 밀착형으로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할것인지 다루는 것이 강점임.
 - 13페이지: 지역 내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지에 중점. 단순히 의료, 케어, 복지 뿐 아니라 건강 프로모션을 통해 의(의료)식(복지)주(주택)의 경계 없이 포괄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도모와 연관된 활동을 함
 - 사업의 다각화: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반 생협과 연계. 시설에 계시던 분이 채택 시스템을 받으려면 이웃들과의 도움 필요함. 향후 치료 뿐 아니라 이웃과의 연대 활동까지 사업 다각화 추진할 예정
 - * 의료생협의 주택사업은 1) 24시간 간호하는 주택, 2)도심의 다세대 공생주택(미나미 의료생협): 젊은층들은 저렴한 집값 또는 노후생활에 대한 공감으로 인해 입주할 유인을 가짐
 - 개호보험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합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을 분리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지금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료생협의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개호 보험법 재정악화됨에 따라 보험 수령의 허들을 높게 잡아 의료 보험법과 다르게 실제 이용자를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음.
 - 개호보험법 현황: 개호보험을 세분화하여 수가가 싼 것은 지자체에 넘기고 있음.
 - 조합원들에 대한 평가: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자조적으로 건강만들기 운동 한다는 점으로 이러한 모습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음.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건강 운동 펼치긴 하지만 지역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리더를 양성한다든가 하여 지역분들에게 전파함.
 - 지역포괄케어: ‘지역 내에서 본인답게 산다’는 이념 자체에는 연합회에서도 동의하지만 국가에서 프로모션하는 정책 중 하나로서의 지역포괄케어에는 회의적. 그 이유는 1)일본도 한국과 같이 공무원의 순환보직 체계이기 때문에 무책임성의 문제가 있음. 2) 이 정책은 도시가 중심이며 소외지역은 커버가 안 됨. 의료 협동조합은 국가 지역 포괄 시스템으로 케어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케어해야하는 상황. 이런 정책 시스템이 생기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이 늘어난 꼴.
 - 의료 생협 시장점유율은 의료가 0.6%, 개호보험이 0.8%로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4위를 차지. 민간 개호기관과 경쟁 심하지만 의료 생협의 서비스 질이 높다고 평가 받고 있음. 그러므로 개호법, 지역 시스템으로 포괄 못하는 분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료 생협

에 보조금, 위탁 요청. 의료생협과 지자체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에서의 역할: 비조합원에게도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에 귀착하게 됨. 저소득층에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정액의료를 시행하고 있음.
-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 참여가 낮아지나?: 그렇긴 하지만 지역포괄케어로 인해 생활단위(지역사회) 기준으로 복지, 주택, 의료 제공하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님.

○ 질문 및 답변

- 사회적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 생협 자체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면세이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없음.
- 연합회 기부금 관련: 한국의 경우에는 기부금이 세금 공제 대상이나, 일본은 기부금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님. 또한 세금공제는 비영리조직에만 해당되고 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으로 취급되지 않음. 농협에서는 비영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됨.
- 연합회에서 의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나? 단위조합의 의료진 확보는 원활한가? 일본도 의사 수급 어려움. 어떻게 하면 관두지 않게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음. 지역밀착형 의료기관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료가 무엇인가를 연수를 통해 교육하고 생협에 적합한 의료진의 육성이 중요함. 가정의료학 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의사들을 교육함. 의사들은 자격증을 따면 스킬도 향상되고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음.
- 개호보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을 지금 구축 중이고 빠르면 올해 내에 만들어 질 것. 사업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는 평가하기 힘들. 일본에서는 요양사 자격증에 몇 가지 급수가 있는데 (낮은 급인)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이 힘들지 않으나, 서비스의 질이 낮지도 않음. 국가에서는 높은 급수의 요양사들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고, 의료생협에서는 통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보다 높은 급수인 개호보육사를 따도록 유도함. 현재, 240여명이 교육받고 있는 중. 의료생협에 상위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많으면 다른 공급자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자료

- 일본 의료복지생협연합회 안내서
- 일본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총회 회의록
- 일본 의료복지생협의 2020년 비전

3. 일본 산업 구조조정 전문가

□ 일반사항

- 일시: 2016년 8월 31일(수) 15:00~18:00
- 장소: 일본 도쿄 시내 회의실(Odakyu Hotel 'South Court')
- 참석자
 - KDI: 김준경 원장, 나정현 전문연구원
 - Takeda Haruhito(武田 晴人) 교수(전 Tokyo(東京) 대학)
 - 우종원 교수(Saitama(埼玉) 대학)

□ 주요 회의 내용

[김준경 원장, 이하 '김']

- 일본의 구조조정 경험에서 배우고 싶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일본은 개별적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본다.
- 한국의 경우 중국이 따라오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펴 왔는데, 산단 내에 훈련센터를 만들어, 단지 밖에서는 대학을 세워 산학협력을 장려하는 한편으로, 단지 안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유치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산업단지와 지역 간의 결합이 너무 긴밀한 탓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서, 예를 들어 조선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지역경제를 직격하는 등 영향이 크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또한 정치적으로도 많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라, 산업단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조선산업을 봐도, 한국은 밀집도가 높다. 일본조선공업회를 방문해서 들었는데, 일본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한다. 영국도 지난 주에 갔다 왔는데,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두세 지역에 너무 밀집해 있다.
- 일본의 경험을 배우고 싶고, 가능하면 공동연구를 하고 싶다. 한국은 제조업을 구조조정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지역과 관련이 깊어,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긴다. 이 경우, 우선 대학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재를 개발해야 하고, 알엔디를 추진해야 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훈련, 재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은 정책과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 산업과 관련된 역사와 실태를 보고 싶고, 이에 의거해 실사구시하는 시점의 연구를 하고 싶다. What to do만이 아니라 How to do를 알고 싶다.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 싶다.

- 조선업,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많은 산업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커버하려면 일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본다.

[다케다 교수, 이하 ‘다’]

- 일본이 잘 했으면, 현재 이려고 있지는 않을 것임으로,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세가지 차원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조직/기업 자체의 재편, 지역경제, 그리고 고용이 그것이다.
- 산업조직/기업 자체의 재편부터 보면, 1970년대 이후 공급과잉이 현재화했을 때, 정부는 세 단계에 걸쳐 산업조정을 해 왔다. 우선 과잉설비를 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자주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업계 조직을 통해 조정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지원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이 전형적이다. 이에 관해 사례 연구를 한다면, 석유화학이 제일 적절할 듯하다. 한편, 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용이하게 하거나 고용조정을 쉽게 하는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 위에 기업이 스스로 재편을 하도록 촉진했다 할 수 있다.
- 지역경제에 관련해서는 1960년대부터 석탄산업, 섬유산업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다. 단기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펼쳐 일단 구제를 한 다음, 타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 왔으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어 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김]

- 우종원 교수가 사례를 발표한 가와사키시의 경우, 중공업의 쇠퇴에 따라 친환경산업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왔다고 보인다.

[대]

- 대도시 주변 지역의 경우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흡수력에 의해 지탱되는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 지역, 야하타 지역, 아마가사키 지역 등이 그것이다.

[김]

- 한국의 평택 지역은 서울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 일본의 사례 처럼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울산이나 통영 등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고립해 있어 문제 해결이 보다 힘들다고 여겨진다.

[대]

- 예전에 철강으로 번성한 카마이시 지역 등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돈을 들이고는 있지만, 해결은 쉽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 지역정책으로는, 테크노폴리스 구상에서 보듯, 지역에 연구개발거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아 이티산업 등 지식집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김]

- 일본이 테크노폴리스 정책을 펼쳤을 때, 주변의 대학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

- 예를 들어 후지쓰가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 등도 있었지만, 지역의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 지역 대학의 이공계가 약한 탓도 있어, 컬래보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

- 한국의 경우, 지방국립화 특성화를 추진했다. 지역 산업에 맞추어 지역 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구미 전자단지에 맞춰 경북대에 전자관련 학과를 만들고, 부산의 조선, 창원 의 기계 등에 맞춰 이 지역에 기계관련 학과를 만드는 등 상당히 체계적으로 매칭을 꾀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

-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 등에서 지방 분산, 지방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 온 경험은 있다.

[대]

- 마지막으로 고용과 관련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고용조정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개별 지역, 개별 기업 등에 맡겨 버린 측면이 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조성금을 지급했지만, 산업정책상의 고려 보다는 어디까지나 지역경제라는 범주에서 처리한 측면이 있다.

[우종원 교수, 이하 ‘우’]

- 첫째, 자동차도 연구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장래를 위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자동차산업도, 그 내실을 보면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거나 혹은 곧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실제 일본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있고, 한국도 국내생산을 유지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 둘째, 해외와의 연관 속에서 지역의 재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국내생산이 줄어들고 동시에 해외로 많은 기업이 빠져나가 일시적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종래보다 좀 더 부가가치를 덧붙이는 데 성공한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국내 산업/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의거하여 지역클러스터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도 한국, 대만 등에 제조업 밸류 체인의 상당 부분을 넘겨 주면서도 보다 상위의 포지션을 점하는 방법으로 지역클러스터를 재생하고자 해 왔고, 성공한 사례도 있다.
- 셋째, 지역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역내외의 자원간 결합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산업” 만이 아니라 “지역”을 중시하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왜냐 하면,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 산업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활성화/재생에는 “열린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내 자원과 지역외 자원을 원활히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내외의 자원을 적절히 결합해 지역활성화/재생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케이스스터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

- 뉴캐슬에 갔더니, 조선 기술자들이 해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캐나다 등)에 나가기도 하고, 서들랜드에 진출한 닛산 관련회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정부가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물론 중고연령층의 재취업은 힘들다고 하지만...
- 해외에서 직접투자가 들어왔다는 점이 매우 크다. 이 케이스에서도 결국 재생에는 실패했다고 보이지만 (옛 조선소 부지를 10년 이상 비워 두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관련 산업/기업에 재취업하는 데는 성공해, 이 점에 관해서는 평가할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규제가 많아 해외에서 직투가 들어오지 않고, 기술 유출 등의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도 힘든 측면이 있다. 일본처럼 테크노폴리스 창출 정책도 펴 오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

- 조선산업에서 실직한 우리 실업자들을 일본의 조선소에 전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 일본의 조선소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기능연수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조선산업 종사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

[김]

- 우교수가 말한 구체적인 케이스 스타디도 하고, 다케다 교수님이 말한 석유화학 등의 산업 사례도 배우고 싶다. 철강 산업의 케이스도 보고 싶다. 당장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 강조점은 고용 및 지역개발에 두고 싶다.

- 한국의 경우는 산업사를 해 온 정진성 교수, 산업경제를 전문으로 해 온 박기주, 배석만 교수등을 섭외하고 있는데, 일단계로는 한일비교연구를 하고 싶다. 일본이 20-25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라 하겠다. 경로의존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일본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테크노폴리스의 좋은 사례도 보고 싶다.

[대]

- 일본에서 공부해 산업 연구가 가능한 연구자로서 자동차의 경우 여인만 교수, 조선의 경우 배석만 교수 등 멤버를 생각할 수 있다. REIT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한일 및 대만의 산업발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연동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밖에 릿교대학의 임채성 교수나 홋카이도대학의 한재향 교수, 그리고 산업재생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교토대학의 와타나베준코 교수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김]

- 논문을 일본어로 써 주셔도 되니까, 다테다 선생님께서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 일본의 산업정책의 역사에 관해서는 꼭 집필해 주시면 좋겠다.
- 기간은 일단 금년 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년이 대통령 선거이어서, 다음 정권의 5년간에 필요한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해 포지션 페이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성과를 근거로 언론 및 정치인들도 포함해 널리 보고하고 싶다.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12월초 정도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프로젝트의 추진방식은 단순히 일본의 연구 논문을 받아서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일본 교수들로부터 배우고 싶다. 연구원의 석사급 연구원들 중 일본어가 가능하고 통산정책사나 산업정책백서를 읽을 수 있는 연구원이 4명이 있고 박사급 연구원이 1명이 있는데, 이들을 “리서치 어시스턴트”로서 활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 케이스 스터디에 동행하거나, 자료를 읽거나 하는 방법으로...

[우]

- 케이스 스터디에 한국 연구자들이 동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오히려 환영할 측면도 있다. 다만, 기초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케이스의 전후 사정/맥락을 이해하는 등은 한국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까지 일본 연구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

[김]

- 포지션 페이퍼에 관해서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1년간 공동연구를 해 주시면 되겠다. 분기당 1번씩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 12월초, 2월말, 5월말, 그리고 8월말에 최종 보고

를 하는 것으로...

[대]

- 12권 통상산업정책사의 영어판 요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를 활용해도 된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조선은 소관 성청이 국토교통성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구체적인 진행은 어떻게 하나? 내 경우는 한국과의 의사소통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

- 역사 연구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도쿄대학의 모노즈쿠리센터처럼 케이스스타디를 해 온 그룹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

- 모노즈쿠리센터와 관련된 인적자원의 활용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내부에도 케이스스타디 팀을 만들었다. 10명의 석사급 연구원을 이에 소속시켰다. 일본의 논문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KDI측으로부터는 안상훈 박사도 포함된다.
-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정성진 교수가 한국측의 총괄을 맡는게 어떨까 한다. 그리고 우교수가 일본측의 총괄을 맡아 주면 좋겠다. 정교수가 곧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를 우교수 및 다케다 교수님이 검토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 연구비 등은 차후에 결정될 것이나,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다.
- 12월초는 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2월 및 5월은 적절히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

- 산업구조조정을 공부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인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이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의 테마에도 이미 착수하고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호세이 대학의 쿠니모토교수를 연구파트너로 해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의료기관 관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협으로는 와세다와 도호대학을 사례로 할 생각이다. Inclusive Growth를 목표로 해서 연구하고 있다.